

# 광주·전남 공무원 명퇴 '비상'

지난해보다 3배 급증... 교단 공동화 우려

연금 부족에 신청자 40% 탈락 기현상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력 감축 방침으로 광주·전남 공직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올 상반기 공무원 명퇴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계의 경우 재원(명퇴 수당) 부족으로 신청자의 40% 가량이 탈락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수백명의 교원들이 명퇴 의사를 밝혀 교단공동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명퇴한 교원은 164명(초등 94명·중등 70명)에 달했다. 지난 2월 명퇴자 150명까지 합치면 올해만 314명이 정년을 수년 앞두고 교단을 떠난 것이다. 광주지역 교원 명퇴자는 ▲2005년 25명 ▲2006년 32명 ▲2007년 90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8월 명퇴자가 159명으로 올해 모두 350명이 명퇴했다. 전남지역 명퇴자 역시 ▲2005년 23명 ▲2006년 49명 ▲2007년 139명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는 광주 190명, 전남 341명 등 모두 531명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 교육당국이 명퇴자에게 지급할 수당 등 재원 부족으로 선별 수용하면서 전체의 39.2%인 234명이 탈락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8월 명퇴자에게 지출한 예산은 총 86억 8천 600만원. 정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1인당 2천만~1억 1천만원 가량이 수당으로

지급됐다.

더욱이 내년에 명퇴 의사가 있는 교원을 조사한 결과 광주는 107명, 전남은 276명에 달해 명퇴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과 교단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내고 덜 받는' 개정 연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명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연금법은 퇴직하기 직전 3년간 봉급의 평균이 수당에 반영됐지만, 개정 연금법은 전체

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원 등 국가공무원 가운데 명퇴자는 총 5천 408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명퇴한 5천 406명을 이미 추월했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은 지난해 391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2배 정도인 781명이 명퇴를 선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여자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만 두자"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명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보전금도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 96억원, 2007년 9천 89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후식·최재호·채희종·정상필기자 who@



## “소방 체력 내가 최고야”

광주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방 체력 경기대회가 28일 광산구 소총동 광주소방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달

리기종목에 출전한 소방관들이 소화장비로 춤무장한 채 힘차게 뛰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방관들은 9월 열리는 전국대회에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나라 시당 당직자가 위원장 등 폭행

### 술자리서 주먹 휘둘러

당 운영위원장 C모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광주시당위원장 K모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K씨의 코뼈

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혔다. C씨는 또 싸움을 말리던 일부 당직자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날 술자리에는 K위원장과 한나라당 광주지역 운영위원장 등 5명의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참석했었다. 최

근 내부갈등으로 분란을 빚었던 광주 시당 분위기를 주스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K씨는 “당 화합을 위해 분란을 조

장을 하는 한편, 중앙당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C씨는 “K씨가 먼저 뺨을 두 때 때리자 화나 술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일단 사건의 실체를 파악중이며, 정식 고소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에 폭행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올렸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당이 윤리위 소집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입장을 밝히는 한편, 중앙당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C씨는 “K씨가 먼저 뺨을 두 때 때리자 화나 술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광주동부경찰은 일단 사건의 실체를 파악중이며, 정식 고소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에 폭행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올렸다.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당이 윤리위 소집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나주시장 배임 혐의 항소심 무죄

### 광주지법 “잘못된 정책 판단 책임 묻기 어렵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8일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배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44) 나주시장과 뮤모(58)씨 등 나주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해 행정·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고인들은 1차 보조금 지급 당시 사업자의 자격

미달 사실을 몰랐고, 이 같은 미비 사항이 보완됐다는 보고에 따라 2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과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만 인정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심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 17일과 지난해 2월 28일 2차례에 걸쳐 12억 3천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개인 비리 없고 지역 발전 노력 ‘선처’

### ■ 나주시장 무죄 이유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신정훈 나주시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법원은 우선 신 시장의 ‘불법행위의 여부’를 놓고 유·무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통한 의도적 행위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같은 인식이 없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금 부당지급 혐의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사

업을 추진한 점은 인정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배임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증명할 근거를 찾지 못한 점도 무죄 선고의 이유중 하나다. 따라서 검찰의 혐의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1년여 동안 2차례나 기소돼 법정에 섰던 신 시장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도 드라마 세트장 건립 과정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을 받았

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단체장 직을 상실하도록 해뒀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처럼 신 시장이 잇따른 법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뇌물 수수 등으로 낙마한 타 단체장과는 달리 개인 비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2차례나 감옥살이를 할 만큼 소신과 개혁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적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부싸움 핫김에 남편 찔러

○…부부싸움을 쟁다. 한 뒤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치른 아내가 스스로 경찰에 자진 신고. ○…광주부부경찰에 따르면 C(여·30)씨는 지난 27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32)과 부부싸움을 벌인 뒤 잠든 남편을 흉기로 한 차례 찔렸다는 것.

O-C씨는 흉기로 찔린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멍한 표정으로 남편과 승강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O-경찰 조사에서 C씨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남편과 자주 다퉜었는데 이날도 새벽에 이 문제로 다시 싸움이 벌어지자 남편이 남편을 흉기로 치렀다”며 “하지만 막상 사건을 저지르고 집 밖으로 나와 보니 남편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완도 유흥주점 화재 참사’ 손배소 항소심

### “전남도 배상 책임없다”

2년 전 일 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완도 유흥주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원심과 항소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소방관리와 인명구조를 허술하게 한 책임으로 소방당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8일 완도 유흥주점 참사 유족 김모(29·피항소인)씨 등 8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무효로 인정해 화재 참사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화재 당시 업주가 수동인 화재 경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전남도)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해 화재가 확대돼 사망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에 대해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 ▲인명구호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원고에게 100만~1억 5천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완도군 유흥주점 화재 참사는 지난 2006년 7월 29일 밤 11시 10분께 합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숨된 8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사고로, 유족들은 전남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화재 당시 업주가 수동인 화재 경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전남도)가 안전점

검을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해 화재가 확대돼 사망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에 대해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 ▲인명구호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원고에게 100만~1억 5천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완도군 유흥주점 화재 참사는 지난 2006년 7월 29일 밤 11시 10분께 합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숨된 8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사고로, 유족들은 전남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화재 당시 업주가 수동인 화재 경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전남도)가 안전점

검을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해 화재가 확대돼 사망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에 대해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 ▲인명구호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원고에게 100만~1억 5천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완도군 유흥주점 화재 참사는 지난 2006년 7월 29일 밤 11시 10분께 합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숨된 8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사고로, 유족들은 전남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화재 당시 업주가 수동인 화재 경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전남도)가 안전점

검을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해 화재가 확대돼 사망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에 대해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 ▲인명구호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원고에게 100만~1억 5천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완도군 유흥주점 화재 참사는 지난 2006년 7월 29일 밤 11시 10분께 합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숨된 8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사고로, 유족들은 전남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화재 당시 업주가 수동인 화재 경보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사실로 미뤄볼 때 피고(전남도)가 안전점

검을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해 화재가 확대돼 사망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남도에 대해

▲인명구조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 ▲인명구호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등을 원고에게 100만~1억 5천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완도군 유흥주점 화